

2012년도 유아교육 정책 방향

정병익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장

OECD는 질 높은 유아교육·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첫째 확연한 사회 경제적 효과, 둘째 부모를 위한 지원과 여성의 사회진출 지원, 셋째 아동을 교육하고 아동 빈곤을 퇴치하며 아동의 교육적 불이익을 극복하도록 도와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과 5세 누리과정 도입, 그리고 3~4세 누리과정 확대 정책은 유아교육·보육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씩 쌓여진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는 유아교육의 선진국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1. 들어가며

2011년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매진하였다. 2009년에 수립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의 세부과제들을 하나씩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2011년 5월에는 우리나라 유아교육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기를 가져 올 5세 누리과정을 발표하였으며, 금년 3월에 5세 누리과정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수행해 왔다. 그리고 2011년 12월 14일,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은 만 3~4세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5세 누리과정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문제를 연구·발표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2012년 1월 2일 신년 국정연

설에서는 올해는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2013년부터는 만 3~4세 어린이도 지원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2012년에는 5세 누리과정 도입과 만 3~4세 확대, 그리고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그 어느 해 보다도 뜨거운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하에서는 2012년에 이러한 과제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내용들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5세 누리과정 본격 도입

금년 3월부터 5세 누리과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5세 누리과정은 2006년에 출생한 만 5세

유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디에 다니는지 공통 과정을 배우게 하고 유아의 보호자에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비 및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유아들의 교육받을 기회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가 2011년 5월 2일, “만 5세 어린이 교육·보육, 국가가 책임진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한 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어린이들이 같은 내용을 배우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비·보육료를 지원받게 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배우고, 어린이집에서는 표준 보육과정을 배운다. 그러나 2011년 9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5세 누리과정’을 고시함에 따라 금년 3월부터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아이들은 같은 내용을 배우게 된다. 유아의 보호자에 대한 교

육·보육비 지원 내용도 크게 달라졌다. 우선 지원대상은 2011년에는 소득수준 70% 이하 가정에 대하여 유치원비·보육료를 지원하였으나 금년 3월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대하여 지원한다. 지원단가도 2011년에는 월 17.7만원이었으나 2012년에는 월 20만원, 2013년 월 22만원, 2014년 월 24만원, 2015년 월 27만원, 2016년 월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아는 교육받을 기회가 확대되고, 보호자는 육아를 위한 경제적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동안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보육료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표 1〉은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달라지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5세 누리과정 도입의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은 2011년 9월 30일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표 1〉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5세 누리과정
지원대상	소득하위 70%	전 계층으로 확대(100%)
교육·보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어린이집 보육과정으로 이원화	표준화된 유아 공통과정으로 일원화
지원단가	공립유치원(월 5.9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11년 월 17.7만원)	공립유치원(현행 유지)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연차적 인상: '16년 월 30만원)
재원부담	유아학비 및 보육료로 이원화 (단, 지원범위 및 단가는 동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아학비 및 보육료부담
관리체제	유치원(교과부) 어린이집(복지부)	현행 유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각각 공포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로서 유치원, 어린이집,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를 무상교육의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만 5세아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를 교육감이 시·도지사에게 위탁하도록 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는 무상보육의 대상을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로 하였고, 무상보육 실시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는 유아교육비 외에 보육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1년 9월말까지 5세 누리과정을 고시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으므로 사실상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은 마련되었다. 그렇지만 금년 3월에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남아 있었으므로 교육과학기술부는 5세 누리과정 준비를 위한 후속조치 작업에 들어갔다.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연수 계획과 해설서·지침서 등 개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TV 광고를 기획하고 실현하는 한편, 유아 수용대책을 검토하였다.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

을 확보하였고, 시·도교육청 유아교육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보건복지부와 육이정책연구소와 함께 향후 추진 방향과 내용을 협의하였다. 이 중에서 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개발은 10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집필진을 구성하였고, 생활 주제별로 심의회를 구성·운영하였다. 교사 연수는 2011년 1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12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연수를 수행할 강사 요원에 대한 중앙연수를 실시하였다.

5세 누리과정 도입을 위하여 금년 1~2월에는 3만 2천명(유치원 교사 15,000명, 어린이집 교사 17,000명)에 달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사 연수는 1월부터 경남지역부터 15시간 집합연수를 실시하고, 2월부터는 30시간 정도의 원격연수를 실시한다. 원격연수는 5세 누리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요 내용별 활동 구성을 보다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담당 교사들이 좀 더 쉽게 5세 누리과정을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적정교육 이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된 것으로 연수의 질 제고는 물론 전문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 하겠다. 교사 연수와 더불어 1~2월에는 교사용 지도서와 보육 프로그램, 교수·학습 동영상 개발을 완료하여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3. 3~4세 누리과정 확대

정부는 2011년에 5세 누리과정 도입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2012년 1월 18일에는 관계부처 합

동으로 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앞서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유아교육과 보육 투자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2011년 9월 8일 추석맞이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는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은 국가 장래를 위해 복지 차원과 다른 투자 개념으로 봐야 하며,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2011년 12월 9일에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유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5세 이하 아이들 모두를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2011년 12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년도 업무보고에서는 “5세 누리과정에 이어 만 4세, 만 3세까지 적용하는 공통과정을 마련하고,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지시하였다. 그리고 2012년 1월 2일 신년국정연설에서는 “올해는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해서 만 다섯 살 어린이를 둔 모든 가정에 보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네 살, 세 살 어린이도 내년부터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하였다.

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의 주요 골자는 다

음과 같다. 우선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3세 누리과정’과 ‘4세 누리과정’을 각각 마련하여 2003년 3월부터 적용한다. 3~4세 누리과정의 구성 방향은 유아기부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공감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만 3~4세아의 연령에 적합한 기본능력을 선별하여 수정·보완하고,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영역 등 5개 영역을 중심으로 유아 주도적인 경험과 놀이 중심의 통합과정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5세 누리과정과 만 2세 이하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성도 고려하고자 하며, 특히 3세 누리과정의 경우는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더욱 고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월부터 누리과정 마련을 위한 준비를 거쳐 6월에는 3세, 4세 누리과정을 고시하고, 11월까지 누리과정 해설서·지도서 개발하여 2013년 2월까지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연령별 누리과정 일원화안은 <표 2>와 같다.

그리고 2012년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에 대하여 유치원비·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 표 2 > 연령별 누리과정 일원화안

구분	현행	'13년 3월			
		만 5세	만 4세	만 3세	만 0-2세
기관	교육·보육과정				
유치원 (교과부)	유치원교육과정 (5세 누리과정/ 만 3~4세 교육과정)	5세 누리과정	4세 누리과정	3세 누리과정	-
어린이집 (복지부)	표준보육과정 (5세 누리과정/ (만 3~5세/2세/2세미만)	(교과부·복지부 공동)			만 2세 미만 및 2세 표준보육과정 (복지부)



2013년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대하여 지원한다. 지원단가도 2012년에는 만 3세는 월 19.7만원, 만 4세는 월 17.7만원이나 2013년에는 만 5세와 같이 월 22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가 전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4년까지는 국고, 지방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하여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만 3~5세 유치원비·보육료 지원 계획 및 재정부담 주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만 5세 유아는 1997년부터 무상교육·보육 원칙이 「유아교육법」 등에 명시되어 있어 시행령 개정만으로 제도 도입이 가능하였으나, 만 3~4세 유아는 법률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일정소득 이하 자녀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3~4세 모든 유아에게 교육·보육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금년 9월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 표 3 〉 유치원비·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구분	5세	4세	3세
'11	소득하위 70%, 월 17.7만원	소득하위 70%, 월 17.7만원	소득하위 70%, 월 19.7만원
'12	전 계층, 월 20만원 (5세 누리과정)		
'13	전 계층, 월 22만원 (5세 누리과정)	전 계층, 월 22만원 (4세 누리과정, 3세 누리과정)	

* 공립유치원비: 월 5.9만원

4. 유아교육 선진화 계획 추진

2012년에는 2009년 12월에 발표한 이후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의 세부과제들을 계속 추진하고자 한다.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의 25개 세부 과제들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제대로 탄력을 받아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법령 제·개정 없이도 추진이 가능한 것들이 있다. 법령을 제·개정한 후에 추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과제들로는 유아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기업체 등의 부설유치원 설립·운영 활성화, 유치원 정보공시제 도입, 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도입, 유치원 운영위원회 도입, 유치원 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능력개발평가 단계적 도입, 공립원장 평가·공모제 도입,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이다. 나머지 과제들, 예를 들어 사립유치원 지원, 공립유치원 확충 및 적정규모 육성, 유치원 평가, 유치원 종일제 운영 내실화, 유아교육 홍보 강화 등은 법령 제·개정 없이도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이다.

법령을 제·개정하여야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도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2012년 1월 현재까지 법령 제·개정이 완료된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법령 제·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최근 법령 개정이 완료되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들에 대해

여 알아보려고 한다.

가. 유치원 정보공시제 도입

2011년 12월 31일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공포되어 2012년 4월부터는 유치원 정보공시제가 도입된다. 유치원 정보공시제는 학부모들에게 유용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대상 교육기관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유치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교육 관련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였다. 개별 유치원이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는 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유치원 규칙·시설 등 기본현황, 유아 및 유치원 교원에 관한 사항, 유치원 교육과정 및 종일제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유치원 원비 및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유치원의 급식·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유아교육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유치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명시하였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시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유치원 정보공시제가 도입되면 유치원은 납입금 등 유치원 관련 정보를 일반에 공시하여야 하므로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공시 정보의 범위·공시횟수, 공시 시기 등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나. 유아교육 발전계획 수립

2012년 1월 26일, 「유아교육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기본계획의 지난해 추진실적을 매년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음해 시행계획 및 지난해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시·도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5년마다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유아교육의 중·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 유치원 수석교사제 도입 등

2011년 7월 25일에는 「유아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유치원에도 수석교사를 둘 수 있게 되었다. 수석교사는 유아교육 단계에서 새로운 교수방법을 개발·보급하고,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앞으로 수업 전문성을 가진 수석교사 제도를 통하여 우수한 교사가 우대받는 풍도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1월 26일 개정되는「유아교육법」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유치원에 관한 평가를 교육감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각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지역 실정에 맞는 유치원 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교육과 관련하여 시·도교육청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5. 나가며

지금까지 2012년도 유아교육 정책방향으로 5세 누리과정 도입, 3~4세 누리과정 도입 확대, 그리고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의 과제 중 법령 개정을 통하여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 위주로 알아보았다. 그러나 앞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을 개략적으로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 많은 세부과제들이 잠재되어 있고, 한편으로는 유아교육의 선진화를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과

제들을 추진하여야 한다.

3~4세 누리과정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통과정 마련과 교사 연수, 교사용 지도서·지침서 개발뿐만 아니라 취원을 증기에 따른 시설 보강, 인력 확보 등도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유치원 간, 어린이집 간,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시설 격차와 교사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 유치원 운영 위원회 설치, 국·공립유치원장 임기·공모제 추진 등 유아교육 선진화 과제의 추진을 위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도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2012년에도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유아교육의 선진화 및 발전을 이루어내기 어렵다. 시·도교육청과 유치원, 학부모, 지역 사회 등 유아교육 현장의 동참도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새해에도 우리 아이들이 장차 세계의 주인 공으로 성장하기 위한 꿈을 펼쳐 나가기를 바라며,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기원한다.